

최근 5년 '노인학대' 광주 감소·전남 증가

배우자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 건수 75% 차지 최종윤 "요양시설 학대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시급"

최근 5년동안 광주지역은 노인학대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6월 노인학대 접수 현황' 자료에 따

르면 전국적으로 노인학대 접수 건수는 총 2만959건으로 2016년 3818건에서 지난해 5188건으로 약 36% 증가했다. 광주는 2016년 249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감소했으며 2018년 24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202건, 올해 6월기준 135건으로 줄었다.

전남은 2016년 280건에서 2017년 298건, 2018년 326건, 지난해 337건, 올해 6월 15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로 5년동안 각각 3233건, 2212건이 접수됐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아들·며느리·딸 등 친족에 의한 학대가 전체 건수의 75%를 차지했다. 이중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 비율이 높았으며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 건수 역시 2016년 952건에서 매년 증가

해 지난해 1749건에 달했다. 아을 요양시설 등 기관에 의한 노인학대 접수 건수도 2016년 392건에서 지난해 106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종윤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노인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가족과 함께 지내거나 시설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호 기자**

차량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검거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다른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0시47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다. 두 차량 운전자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10여분 간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릉서 간판 달던 크레인 넘어져 2명 부상

5일 오전 10시14분께 강원 강릉시 금학동 71번지 야디다스 매장 앞 공사현장에서 간판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크레인이 파손됐다.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부상자 중 1명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으나 병원 이송 중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태백 국도서 승용차 불...인명피해 없어

추석연휴 마지막날 강원 태백시 화전동 두문동재 국도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5일 태백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분께 태백시 화전동 두문동재 국도에서 승용차 엔진룸 과열로 보이는 불이 났다. 당시 운전자는 이상한 냄새를 느낀 뒤 차를 세우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불은 차량 엔진룸을 태우고 약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차량 탑승자들이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엔진룸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여수 대포터널 내 6중 추돌...5명 부상

5일 낮 12시43분께 전남 여수시 울촌면 17번 국도 대포터널(순천-여수)내 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10여 명이 차량 내에서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차량 화재 등 2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규모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지정3터널서 차량9대 추돌...5명 부상

광주원주고속도로 지정3터널서 차량 5대와 4대가 각각 추돌, 총 9대가 추돌해 5명이 다쳤다. 4일 오전 11시26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지정3터널 광주방향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로 인해 차량이 정체된 가운데 뒤이어 온 차량 4대도 추돌해 총 9대의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A(36)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정체로 인한 추돌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한글날 연휴 10인이상 집회 110건...모두 안돼"

코로나 확산 예방 위해 금지·제한



경찰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9일 한글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한글날 집회를 금지·제한한다는 방침을 제차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은 "10월 9~10일 한글날 연휴 기간 중 집회 신고 관련, 경찰에서는 방역당국의 집회 제한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를 금지·제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다만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가 해제될 경우, 집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제한 조치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서울 내 전 지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으며,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는 관내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금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오는 9일 '10인 이상 개최 예정'으로 신고된 집회는 총 13개 단체 56건이다. 다음 날인 10일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는 총 12개 단체 54건이다. 경찰은 제한 조치 기준에 따라 이들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

를 했다. 9일로 신고된 '10인 미만 집회'는 총 1060건, 10일로 신고된 10인 미만 집회는 총 103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10인 미만 신고 집회는 지자체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될 경우 금지 통고 중"이라고 했다. 한편 보수단체 8·15 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는 1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에 앞서 이날 오후 2시께 "야외행사를 권장하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방역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8·15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길은 그나마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다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하게 됐다"며 "야외라도 참가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게 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로 신고된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혹시 모를 대규모 집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다. 경찰은 서울 시정역 인근에 경찰차량과 버스 수십대를 배치했고, 광화문 인근에도 오전부터 경찰 병력을 배치한 뒤 주변을 통제했다. **기동취재본부**

공공 횡령 공무원 전남 15명...전국서 '최다오명'

최근 5년 간 공공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지역 공무원이 1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공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전남지역 공무원은 15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공공유용과 금품수수 징계를 받은 전남지역 공무원은 각각 13명과 40명이며, 전국에서 두번째, 세번째로 높았다. 비위행위로 해임된 전남지역 공무원은 36명으로 경기 6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전남지역에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862명으로 경기 1631명, 서울 1118명, 경북 909명, 경남 880명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전남지역 비위 유형별 징계 인원은 품위손상이 59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직무태만 66명, 금품수수 40명, 복무규정 위반 38명, 공공횡령 15명, 감독소홀 15명, 공공유용 13명, 직권남용 11명, 공문서 위반조 7명, 비밀누설 3명, 기타 61명이다. 징계양정별로는 견책이 35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감봉 333명, 정직 106명, 해임 36명, 강등 17명, 파면 13명이다. 최근 5년 간 광주지역 공무원의 징계인원은 210명이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네번째로 적었다. **김민정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